

통일의 전초기지, 접경지역을 살리자!

함명준
고성군수

성장과 발전동력을 잃어가는 접경지역

접경지역은 과도한 군사·환경적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하고 생산가능 인구비율이 전국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 내 소비 위축, 생산 및 고용 감소는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의 2020년 재정자립도는 8.1~9.0%의 범위로 전국평균인 45.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인구, 사업체, 대규모 산업단지의 부족으로 자체 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 등 교육 여건에 대한 투자가 미미해 우수인력 양성 및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최고 지성을 양성하는 대학교가 접경지역 5개 군에서는 고성군에 위치한 경동대가 유일하다.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해체, 통합작업은 우수 지역 확대와 맞물려 지역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접경지역자원특별법 우선 적용의 필요성

위와 같이 오랜 기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국가안보가 유지된 만큼 이제는 국가 주도의 접경지역 발전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남북평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때이다.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를 들고 공동 입장한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 평가받는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화해 무드는 통일과 경제협력에 관한 기대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점에서 접경지역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전진기지와 교류협력의 관문 역할을 담당할 중요 지역으로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가 없다. 또한, 자원조달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별법이란 명칭에 걸맞게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은 물론 자원조달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실질적인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방개혁 2.0에 따른 피해지역의 우선적 지정과 함께 상권에 대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대 통폐합에 따른 유휴지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이 선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정책 기조와 ‘화해와 협력’이라는 전략 하에 세워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3대 경제벨트(환동해 경제벨트, 접경지역 경제벨트, 환서해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북방경제 연계 추진이 그 요체이다.

강원권의 경우 환동해 경제벨트 및 접경지역 경제벨트가 추진 구상에 해당된다. 환동해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서는 속초에서 단절된 남북 7축 평화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를 고성 북부까지 연장하는 한편,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서고속화철도간 직결노선을 연결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극동지역 국가들의 북방 물류 루트 선점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북방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물류단지와 거점항만을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계해 대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접경지역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서는 DMZ를 세계 평화·협력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해 국제평화 및 외교 관련 회의를 유치하고, 세계적 수준의 평화교육 및 역사 체험지로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70년 동안 잘 보존된 생태자원을 활용해 힐링과 휴양 등을 연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길 탐방 둘레길 조성 등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광과 연계한 산림자원의 활용가치 극대화를 위해 DMZ 평화 국립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남북 산림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서부의 파주, 중부의 철원에 이어 동부의 고성에도 건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민간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지정하는 등 남북 공동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급부상된 청정 강원 동해지역이 국민 힐링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산림자원
보호·육성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고성에도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허리로써 국토의 중심에 입지해 있으며 역사·문화·생태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수도권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개발 잠재력이 확보되어 있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해 활용 가능한 토지 및 자원도 많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대결과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지역으로서 미래 100년의 한반도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UNIFICATION-NORTHERN RESEARCH CENTER

발행번호
No. 21-10

발행일
2021년 7월 19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